

# 충장로 빈 상가 전단지 도배...도심 흉물 '눈살'

공실률 30%대로 늘어나며  
불법 광고 벽보판으로 전락  
사유건물이라 손 대기도 어려워  
광주 이미지 훼손 방지 대책 시급

“충장로 입구부터 전단지를 마구 붙였다 댄 ‘흉물’이 보이니 착잡하죠. 타지역 사람들이 충장로에 올 때마다 이 모습을 볼텐데 광주를 어떻게 볼지 걱정됩니다.”

20일 광주시 동구 충장로1가에서 만난 광주 시민 이승정(85)씨는 상가 외부에 난잡하게 붙은 전단지들을 보고 한숨을 쉬었다. 최근 부쩍 충장로 일대에 빈 상가가 많아지더니, 각종 전단지들이 나붙어 ‘난장판’이 됐다.

이씨는 “장사를 안 할거면 제대로 치우고 나가야지, 너무 지저분해서 보기 힘들다”며 “지자체까지 전단지를 붙여대는 형편”이라고 혀를 찼다.

충장로에서 직장을 다니는 김대문(30)씨도 “안그래도 날이 갈수록 충장로에 빈 상가가 늘어 유명 도시마냥 황폐한데, 전단지까지 어지럽게 붙어있으니 무섭기까지 한다”며 “공실률을 낮추든, 대대적인 전단지 제거 작업을 하든 해야지 지자체가 언제까지 방치할 생각인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충장로 도심의 빈 공실 상가들이 광고 전단지로 몸살을 앓고 있다.

최근 충장로 도심의 공실률이 30%대로 늘어난 데 이어 빈 점포마다 불법 전단지를 도배하는 사례도 급증해 도시 미관을 해치고 있는 것이다.

광주일보 취재진이 20일 충장로 1가부터 3가까지 둘러 본 결과 빈 점포에 전단지 수습장이 경쟁적으로 붙어 있었다.

1년여 전 커피 전문점이 있었던 충장로 1가의 한 건물은 전단지뿐 아니라 전단지를 떼고 남은 청테이프 조각과 끈으로 뒤덮여 있었다. 불과 수개월 전 폐업한 충장로 3가의 한 옷가게 건물 통유리창에도 전단지 10여장이 줄줄이 붙어 있어 내부를 볼 수 없을 정도였다.



20일 광주시 동구 충장로 한 공실 건물에 각종 홍보 포스터가 붙어있다.

/나명주 기자 mjna@kwangju.co.kr

상인들은 “흉물스러워 제거하려고 해도 엄연히 ‘사유 건물’인 공실 상가까지 손을 대기 어렵다”고 하소연했다.

각 건물의 관리 주체인 건물주들은 주변 상인들이 현수막 등으로 흉물스런 전단지를 가리려고 하면 ‘임대 나가야 하는데 왜 가게를 가리느냐’며 되레 화를 낸다는 것이다.

동구청 관계자 또한 “불법전단지라 해도 구청 직원이 직접 떼는 데도 한계가 있고, 사유 건물인 만큼 건물주와 관리자 등이 나서서 청소할 수밖에 없다”며 “근본적인 문제인 공실 자체를 줄이기 위해 내년부터 빈 점포의 임대료를 낮추고 청년점포·여행자센터 등으로 채워넣는 협약을 계획 중이다”고 말했다.

지자체가 나서서 불법 전단지 부착을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전단지 중에는 광주시청, 광주시 동구청,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등 지자체·공공기관에서 붙인 것도 상당수 있기 때문이다.

동구청 관계자는 “영업 중인 가게에 전단지를 붙이려면 상인들과 일일이 협의를 거쳐야 하니, 일단 공실 상가부터 전단지를 붙이곤 한다”며 “행사 기획부터 홍보까지 구청이 용역을 맡긴 행사대행사에서 도맡아 보니 대행사에서 전단지를 어디에 부착했는지 일일이 파악하지는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상인들은 결국 근본적으로는 치솟는 충장로 공실률을 낮추고 상인들을 입점시켜야 불법 전단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정일성 충장로1·2·3가 상인회장은 “일일이 떼기에는 인력이 부족하고, 불법 전단지 부착업체를 찾아서 고발까지 하고 싶으나 인적사항을 파악하기 어려워 애만 태우고 있다”며 “충장로를 활성화시켜 상인들을 입점시키는 것 외에 표족한 수가 없는 실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충장로·금남로 지역의 상가 공실률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꾸준히 상승해 30%에 육박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기준 충장로·금남로 중대형상가 공실률은 지난 2019년 15.2%에서 올해 29.9%로 5년 사이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 빌라 소유주가 12억 전세사기

입주민 7명 울린 소유주 영장 신청

광주경찰청은 “광주시 광산구 월계동에서 보유 중인 빌라 한 동을 이용해 전세사기 행각을 벌인 A씨를 사기 혐의로 입건하고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빌라에 입주한 주민 7명의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잠적하는 방식으로 12억여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4월부터 전세사기 피해 사실을 접하고 수사를 시작해 구체적인 피해액과 추가 피해자를 조사 중이다.

이와 관련, 최근 호남100년 살림 민심센터(이하 센터)는 지난 5월부터 전세사기 피해신고지원센터를 운영하고 A씨로 인한 피해 사례를 모아 20일 발표했다.

피해자 B(34)씨는 “전세 계약이 끝나 보증금을 돌려받으려 하자, A씨가 ‘다른 사람에게 건물을 매매했으니 이제 나와는 무관하다’고 발뺌했다”며 “청년전세자금대출 등을 통해 빌린 1억 2000만원 전세 보증금을 통째로 날렸고, 소송을 준비하며 우울증과 공황장애까지 얻게됐다”고 주장했다.

또다른 피해자 C(여·26)씨는 “지난해 6월 대출금 9000만원을 포함한 총 1억원의 보증금을 내고 입주했는데, 계약 종료일이 가까워오자 집주인과 연락이 끊겼다”고 밝혔다.

센터는 이 사건이 전형적인 ‘다가구주택반환보증사기’에 해당한다고 분석했다.

현행법상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으로 분류되며 임차 가구별, 호수별로 구분 등기를 할 수 없는데, 이 탓에 세입자들이 다른 세입자의 보증금 규모를 확인할 수 없어 피해가 커졌다는 것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올해 1분기에 발생한 전세사기 사고를 주택 유형별로 나뉠 때 다가구주택반환보증사기가 49.3%를 차지했다.

/김대민 기자 kdi@kwangju.co.kr

## 법원 “철거현장 찍는 상가 업주 CCTV 철거하라”

현대산업개발 손 들어줘

아파트 철거현장의 낙하물을 우려해 상가 업주가 설치한 CCTV를 철거하라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이 아파트는 신축 과정에서 발생한 붕괴사고로 철거가 진행 중인 광주시 서구 화정동 아이파크다.

광주지법 민사21부(부장판사 조영범)는 HDC 현대산업개발이 광주시 서구 화정동 아이파크 공사 현장 인근 숙박업소 업주 A씨를 상대로 제기한 CCTV 철거 가처분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숙박업소 옥상에 설치한

CCTV 카메라를 명령 송달일로부터 5일 이내에 철거하라고 명령했다.

현대산업개발은 A씨가 최근 건물 옥상에 CCTV를 설치하자 철거해 달라고 가처분 신청을 냈다. A씨는 현대산업개발과 피해보상 협의를 하지 않은 상가 업주 가운데 한 명이다.

A씨는 숙박업소 시설안전에 CCTV를 설치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로 항변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현행법상 업무를 목적으로 CCTV 운영시 원칙적으로는 공개된 장소에서 카메라로 사람 또는 그 사람과 관련된 사물을 촬영해서는 안된다. 시설 안

전을 위해서나 공중위생 공공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에는 설치가 가능하다.

재판부는 “CCTV가 설치된 장소가 일반적인 숙박업소들이 설치하는 장소(출입구 부근)가 아닌 옥상인 점, CCTV가 모델 앞이 아닌 공사장을 비추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낙하물이 A씨 업소의 안전에 영향을 주는지 여부를 촬영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화정동 아이파크는 지난해 1월 11일 붕괴 사고가 발생해 건설노동자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한 현장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세무조사 무마 대가 수천만원 가로챈 일당 징역형

‘세무조사를 무마 시켜주겠다’며 유혹업소 업주에게 수천만원을 가로챈 일당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5단독(부장판사 김효진)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8)·B(41)·C(42)씨에게 각각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은 2019년 11월부터 12월께 국제정 세무조사를 받게된 유혹업소 업주로부터 세무 공무원 청탁비 명목 등으로 4차례에 걸쳐 8200만원을 받아 정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C씨와 공모해 2019년 6월 유혹업소 업주에게 ‘국제정 직원들을 골프접대는 하는데 돈이 필

요하다’는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A씨가 퇴직한 검찰청 수사관인 삼촌한테 말해 줬다”며 인사비 등을 요구하기도 했다.

유혹업소 업주는 ‘마약 투약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는 친동생에 대한 수사를 잘 좀 처리해달라’고 이들에게 요청했다.

재판부는 “공정하게 처리돼야 하는 사법·행정절차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행위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범행 액수가 적지 않은 점, 금액 일부를 반환한 점, C씨가 같은 혐의로 다른 재판에서 판결을 확정받았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건물·주택 리모델링, 신축, 지붕공사

### 건축시공, 설계, 견적, 리모델링, 상담문의



건물 리모델링



칼라강판 지붕공사



징크판넬시공

창호(샷시)교체



주택(외, 내부) 리모델링



전원주택신축

공장신축



농막

옥상스틸방수